

태국 2019: 군부 중심의 연정체제 확립과 고령화 현상의 가속

한 유 석*

국문초록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5년 만에 치러진 2019년 태국 총선거는 군부의 지지를 받는 팔랑쁘라차랏당(Palang Pracharat Party)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번 선거는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을 중심으로 한 친탁싌 계열의 패배, 신생 정당 아나콧마이당(Anakhot Mai Party)의 돌풍, 기존 거대 양당의 한 축이었던 민주당의 참패, 친군부 세력의 연정 구성 및 군부 통치의 제도화, 뿌라우트 찬오차(Prayut Chan-o-cha)의 총리 취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편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여겨졌던 고령화 현상이 태국 사회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태국은 가족계획사업의 성공과 보편적 의료복지 제도의 확립으로 인해 빠르게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태국 정부는 정년 연령 연장, 연금 지급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태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은 3.1%로 전년 대비 1% 하락하였다. 전세계적 경기 침체의 여파는 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고, 내수 시장의 침체로 연결되었다. 한편 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 문제도 지속되었다. 계층 간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방콕 인근의 중부지역의 공업도시에서 추진 중인 동부경제 회랑(East Economic Corridor) 개발 및 타일랜드 4.0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태국의 계획이 중부 중심의 불균형 발전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국제 관계 측면에서는 총선 실시를 계기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강사 /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객원연구원,
hans169@naver.com.

었고,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아세안 의장국의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타일랜드 4.0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2019 태국 총선거, 군부 중심의 연정, 고령화 사회, 타일랜드 4.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 들어가며

2019년 태국 선거는 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군부의 섭정을 끝내고 새롭게 민간 정부로 이양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군부가 통치의 기간을 연장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5년 동안 군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금지법을 발휘하는 등 군부 통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선거를 외치는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군부는 자신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6년 8월 7일 국민투표 결과 61%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20번째 헌법을 2017년 4월 6일 와치라롱껀 국왕이 인준함으로써 신헌법이 공포되었다. 이는 군부의 장기적 정치개입의 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상원의원 250명을 군부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원 250명과 하원 500명을 합쳐 750명의 투표로 총리를 선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군부가 지지하는 후보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듯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후에 실시된 총선에서 군부가 정당 세력화한 팔랑쁘라차랏당(Palang Pracharat Party)이 승리했다. 향후 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군부 정권이 어떠한 해답을 내놓는지가 정권 운영의 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현안들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기에 군부 정권의 문제해결 여하에 따라 태국 정치가 앞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안개 속, 즉 군부 정권 이후의 시대로 전환될 것인지, 아니면 안정된 리더십을 발휘해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국민의 삶의 질에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2019년 태국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네 가지 영역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각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변화와 관련해 2019년 총선과 군부 중심의 연정체제 확립에 주목하였다. 둘째,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고령화 현상의 가속에 주목하였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지역 불균형 발전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대외관계,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 정치 및 사회문화

1. 정치: 2019 총선과 군부 중심의 연정체제 확립

2014년 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군부는 정권 장악 후 태국의 정세 안정을 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랜 기간 선거를 계속해서 연기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선거 지연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해왔고, 실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한편 선거가 5년 간 연기된 탓에 5천 만 명 이상의 유권

자 중 7백 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다. 마침내 선거일이 임박했고 선거 하루 전인 2019년 3월 23일, 와치라롱껀(Vajiralongkorn) 국왕은 ‘좋은 사람’을 지지하라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BBC 2019/03/24).

선거 이전부터 여러 잡음이 일었다. 군부 주도 하에 만들어진 2017년 헌법으로 인해 사실상 군부의 임명을 받는 상원의원 250명이 하원과 함께 총리 선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총선 후에도 완전한 민정이양이 불가능하다는 점(김홍구·이미지 2019: 128), 선거일 발표 이전까지 정치활동 및 5인 이상 정치집회가 금지된 점, 친군부 정당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선거일이 계속해서 연기된 점 등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거라는 불안감이 태국 국민들 속에 자리 잡았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2019년 3월 24일 5년 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는 예상과 달리 팔랑쁘라차랏당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주목할 점은 총득표 1위와 지역구 당선 1위가 각기 다른 당이었는데, 약 8백4십3만 표를 획득한 팔랑쁘라차랏당이 득표수 1위를 기록하였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포함 총 116석(지역구 96석, 비례대표 19석)을 차지한 반면, 지역구 당선 1위는 약 7백9십2만 표를 획득하였고 지역구만 136석을 차지한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이었다. 한편 친탁썸과 반탁썸의 경쟁구도에서 반탁썸 계열의 중심이었던 민주당은 약 11%의 저조한 득표율과 함께 총 5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며 아피싯 전총리가 대표직을 사임하였다. 반면에 신생 정당인 아나콧마이당(Anakhot Mai Party)은 17%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며 80석을 차지하였다.¹⁾

군부 중심의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의 승리와 함께 2019년 태국 선거는 간략하게 프어타이당을 중심으로 한 친탁썸 계열의 패배, 신

1) 선거 결과는 태국 선거관리위원회 보도 자료(Election Commission 2019)를 참고하였다.

생 정당 아나룻마이당의 돌풍, 기존 거대 양당의 한 축이었던 민주당의 참패, 친군부 세력의 연정 구성 및 군부 통치의 제도화, 빠라우트 짠오차(Prayut Chan-o-cha)의 총리 취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총선 결과를 통해 드러난 여러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팔랑쁘라차랏당을 비롯한 친군부 세력의 연정 구성 및 군부 통치의 제도화이다. 선거 이후 5% 이상의 무효표 처리, 일부 재외국민 투표 무효 처리, 선관위 개표 결과 발표의 수차례 연기 등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며, 2개 선거구에서 재검표를 실시하고 6개 선거구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랑쁘라차랏당이 단독으로 하원 116석을 확보함으로써 연정을 통해 소수 의석만 추가하면 정권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었다(이재호 2019b: 7-8). 이후 선관위에 의해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팔랑쁘라차랏당을 비롯한 친군부 계열 정당 137석, 프어타이당과 아나룻마이당을 비롯한 반군부 계열 정당 246석, 민주당과 품짜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을 비롯한 중도 정당 117석으로 하원이 구성되었다. 반군부 계열의 정당들이 100석 이상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상원 독점에 기대지 않고 연정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는 팔랑쁘라차랏당과 빠라우트 총리는 중도 정당인 민주당과 품짜이타이당을 연정에 합류시키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6월 5일 상하양원회의에서 빠라우트 짠오차를 새로운 총리로 선출하였다(김홍구 2019: 43-44).

문제는 선거 이후에도 군부 통치의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들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2017년 헌법 개정안은 완전한 민간 정부로의 권력 이양 이전까지 5년 동안을 잠정적 민간 이양기로 규정하고 이 기간 동안 상원의원은 군부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 출신 인사의 총리 선출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며, 국가 비상상태 발생 시 군 수뇌부가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ibid: 44-45).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적 장치들은 태국의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박은홍은 이러한 태국 정치의 비극적 상황을 보편적 민주주의 개념과 대별되는 ‘타이식 민주주의’의 오용이라 비판한다. 타이식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보다 선출되지 않은 좋은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보다 태국다울 수 있다는 개념인데, 작금의 상황을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콘디’(Khon-dee), 즉 계몽군주가 통치하는 훈정(訓政)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한다(박은홍 2018: 224-225). 그러므로 선거 하루 직전 와치라롱껀 국왕의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사람’들이 통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 발표는 친군부 세력을 지지하는 왕실의 정치개입이라 할 수 있다(Prachatai 2019/03/24).

둘째, 프어타이당을 중심으로 한 친탁썬 계열의 패배이다. 친탁썬 계열 정당은 중심인 프어타이당과 자매 정당이라 할 수 있는 타이락싸찰당(Thai Raksa Chart Party), 프어찰당(Puea chat Party), 프어락싸찰당(Puea Raksa Chat Party) 등이다. 이 중 프어락싸찰당의 총리 후보로 태국 왕실의 일원이었던 우본랏 랏차간야(Ubonrat Ratchakanya) 공주가 2월 8일 등록하였으나 국왕의 반대 성명 발표와 함께 출마를 포기했다. 약 한 달 후인 3월 7일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당의 해산과 함께 10년 동안 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Bangkok Post 2019/03/07).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 창당했다 할 수 있는 자매정당이 선거 직전 해산되면서 친탁썬 계열은 막대한 정치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선거 결과에서도 프어타이당은 기존 선거와 달리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일례로 동북부 지역과 함께 프어타이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북부 지역에서 팔랑쁘라차랏당과의 격차가 3석(프어타이당 28석, 팔랑쁘라차랏당 25석)에 불과했다(김홍구 2019: 42).

셋째, 신생 정당 아나콧마이당의 돌풍과 기존 거대 양당의 한 축이었던 민주당의 참패다. 이는 태국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2006년 이후 태국 정치는 친탁썬과 반탁썬의 대결 구도로 요약된다. 친탁썬 진영은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Party)과 그 후신인 프어타이당 계열 정당이 중심이었고 반탁썬 진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친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이 군부의 집권 연장을 위해 반탁썬 진영과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 등을 주장하며 중도 노선을 표명하였으나 53석 확보라는 참혹한 선거 참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총리 선출 직전 친군부 정당 연정에 참여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인물과 정당은 타나틴 쩡룽르양깃(Thanathorn Juangroongruangkit)과 아나콧마이당이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타나틴은 아나콧마이당을 이끌고 친탁신계도, 친군부계도 아닌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총선 1년 전인 2018년 3월에 창당한 아나콧마이당은 군부 주도 하에 만들어진 헌법 개정, 군부 독재 타도와 부패청산 등을 주장하며 군부 통치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에 창당 1년 만에 81석을 확보해 제 3당의 위치에 오르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후 집권한 군부는 타나틴과 아나콧마이당을 가장 큰 위협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총선 이후 다양한 정치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타나틴이 언론사 주식을 소유했다는 명목으로 그의 하원의원 자격을 상실시켰으며,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문구를 당 규정에 명시했다는 이유로 정당해산 심판 소송을 청구하였다.²⁾ 그러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정당 해산의 위기에

2) 2020년 1월 21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아나콧마이당과 당 주요 인사들이 입헌군주제를 붕괴시키려 한다며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근거가 없다며 불허했다(Khaosodenglish 2020/01/21). 당 규정에 ‘국가수반으로서 국왕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라는 문구가 아닌 ‘헌법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라는 문구를 적시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번 소송(연합뉴스 2020/01/21)은 아나콧마이당과 타나틴이 군부 정권의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몰리고 의원직을 상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방콕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아나콧마이당(31.42%)은 정당 지지도에서도 포어타이당(19.95%)과 팔랑쁘라차랏당(16.69%)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연합뉴스 2019/12/30).

2. 사회문화: 고령화 현상의 가속

고령화 현상은 보통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 경제 성장과 더불어 복지시스템, 특히 교육과 의료복지시스템이 확립된 상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태국의 경우는 예외적 사례에 속한다. 2018년 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6,610달러에 불과하며, 농업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기술과 자본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다. 이처럼 태국은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예외적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2019년 6월 UN이 발표한 태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535명으로 전체 200개국 가운데 171위를 기록했다. 앞뒤로 유럽의 복지국가인 스위스(170위)와 핀란드(172위)가 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³⁾ 이처럼 태국은 선진국 수준의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고령화 사회의 측량 지표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3년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긴 이래, 2018년 11.9%에 이르렀으며,⁴⁾ 2020년에는 12.9%(약 9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⁵⁾

3) 출처: <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Fertility/>

4) 출처: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65UP.TO.ZS?locations=TH>

5) 출처: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713667/thailand-forecast-aging-population/>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도 높아졌다. 1975-1980년 63.31세에 불과했던 태국의 평균 수명은 2015-2020년 76.83세까지 증가했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의료기술 발달 및 의료복지 체계 확립, 위생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요인에 따라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민수 2019).

이처럼 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유로 먼저 가족계획사업을 꼽을 수 있다. 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1970년대 이후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이었다. 태국의 국가적 개발 계획으로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ESDP, National Economic Social Development Plan)의 3차 계획(1972-1976년)의 주요 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이 포함되었으며, 1976년 경구 피임약과 자궁 내 피임기구 등이 무료로 보급되었다. 이후 빈민층과 북부의 고산족, 남부의 무슬림, 동북부의 이싼인 등을 중점 대상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었다(Whittaker 1998: 139). 그 결과 1980년 3.92명 이던 태국의 출산율은 2015년~2020년 기준 1.53명으로 급격히 낮아졌다(김민수 2019).

출산율 저하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보편적 의료복지 제도 확립과 위생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해 태국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노년 인구의 보살핌과 의료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 네이션’(The Nation)에 따르면, 태국의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한데 비해 현재 태국의 노년 인구는 12.9%이며, 2031년 인구의 20%로, 2050년 인구의 30%로 노년 인구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태국인 세 명 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The Nation 2019/03/28), 태국의 잠재적 노동 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2040년 태국의 노동 인구는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Bangkok Post 2016/01/14).

태국의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를 가능하게 또 다른 요인은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의 확립이다. 2001년 탁신 정부의 출범과 함께 태국은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의 확립에 힘써왔다. 소위 ‘30바트의 혁명’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누구나 30바트만 지불하면 지역 보건소 및 공공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의료보험 시스템을 확립하고 크게 확대한 계획이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Damrongplisit, Melnick 2009: 458). 이 포괄적인 의료복지 제도를 시행한 지 13년만인 2014년 전체 인구의 99%가 공공보험 제도에 가입하였다. 보편적 의료보험은 빈곤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Seo 2015). 더불어 만성 질환으로 인해 고통 받던 노년층도 지속적인 의료 관리를 통해 노동 가능 인구로 변모할 수 있었다(Thailand Business News 2019/08/26). 이처럼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편적 의료복지 제도를 확대해 온 결과, 2019년 11월에 발표된 세계보건안전지수(Global Health Security(GHS) Index 2019) 평가에서 조사에 포함된 195개 국가 중 태국은 세계 6위의 보건안전 제도를 갖춘 나라로, 한국(9위)보다 앞선 아시아 내 1위에 랭크되어 있다(Thailand Business News 2019/11/18).

고령화와 저출산은 노동 인구 감소, 퇴직자의 노후빈곤 문제, 연금 재정 불충분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 정부는 일찍부터 발 빠르게 대처해 왔다. 1982년 ‘노년층을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the Elderly)를 발족해 국가 보장 1차 계획(1986-2001년)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2차 계획(2002-2021년)이 실행 중이다(Debavalya 2008: 139-149). 이 계획에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노인 건강 증진 사업, 노인 대상 사회적 보호 보장 및 지속 가능한 소득 보장 장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Prasartkul 2016: 11-13).

현재 태국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을 오히려 장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태국은 기성 세대의 정년 연장으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태국 법정 정년 연령인 60세를 넘긴 인구 중 40%가 생계를 위해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정 정년 연령을 63세로 연장했으며, 민간 기업의 정년 연장도 논의 중이다(한겨레 2019/11/17). 이와 더불어 2014년부터 국민 연금에 15년 이상 가입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한국금융 2019/07/07).

Ⅲ. 경제 및 대외관계

1. 경제: 양극화의 심화와 지역 불균형 발전

태국 경제는 2006년 탁싨 총리의 실각 이후 국내 정치 갈등으로 인한 정정불안,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왔다. 한때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대로 떨어졌으나, 2014년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투자·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4.1%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2019년 내내 지속된 바트화 강세로 인해 수출과 관광 산업이 위축될 것을 염려해 태국 중앙은행은 단기성 투기자금 유입 억제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펴 바트화 강세 억제를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2019년 3월 실시된 총선에서 친군부 세력의 승리로 빠라우 총리가 재임하면서 기존 주요 경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이재호 2019a: 3-5). 그러나 2018년 4.1%까지 상승하였던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정국 안정으로 인한 경제 성장이라는 예상과 달리 2019년 3.1%로 하락하면서 다소간 주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세계적 무역전쟁과 경기 침체의 여파가 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수출 감소가 내수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Deloitte Thailand 2019: 13).

한편 태국은 2019년에도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 분배 문제가 지속되었다. 2018년 스위스 은행이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평가 조사에서 태국은 러시아와 인도를 제치고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2018년 통계에서는 최하위 70%가 5%의 부를 차지하였고(Bangkok Post 2018/12/06), 이와 대조적으로 2019년 통계에서는 최상위 1%가 50.4%의 부를, 5%가 67.8%의 부를, 10%가 76.6%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2019: 168).

태국의 지니 계수의 변화 추이도 태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 분배와 양극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4년 이래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 36.5%까지 감소하였던 태국의 지니 계수가 2018년 43.7%로 급증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40%를 넘어섰다.⁶⁾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는 태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평가한 스위스 은행의 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도 소득 격차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고 인정하였다. 태국 정부는 인구의 상위 10%와 빈곤층 10%의 소득 격차를 현재 22배에서 2037년까지 15배로 줄일 계획이며, 같은 기간 내 지니 계수도 0.36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The Nation 2018/12/07).

계층 간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1961년 이후, 태국 정부는 5년 단위로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ESDP, National Economic Social Development Plan)

6) 출처: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GINI?name_desc=false,
<https://knoema.com/atlas/Thailand/GINI-index>

을 발표해 왔는데, 가장 최근 발표된 12차 계획(2017-2021년)의 주요 내용은 경제회랑발전 및 경제특구를 개발해 지역별 발전 도모,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동부경제회랑(EEC, East Economic Corridor) 개발 및 ‘타일랜드 4.0’⁷⁾ 추진이다(NESDB 2017).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회랑과 경제특구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회랑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 지역 거점도시를 발전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다. 동시에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콕 근교의 동부임해지역(Eastern Seaboard)을 ECC로 확장해 타일랜드 4.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경제회랑, 경제특구)과 미래 신산업 육성(ECC)을 동시에 추구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이다.

이처럼 태국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메콩지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 국가들과 연계한 경제회랑 발전 계획을 본격화 하였으며, 경제회랑의 태국 영토 내 최극단인 국경 지역에 10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 왔다. 태국 정부는 국경 부근 경제특구에 투자산업 유치에 대해 지역기반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산업 인프라 미구축 및 투자 저조로 인해 성과가 나오지 않자, 이미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던 동부임해지역(Eastern Seaboard)을 EEC로 확장·발달시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타일랜드 4.0)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김민수 2017). 타일랜드 4.0 프로젝트는 규모 및 예산 면에서 아세안 최대 개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지역 불균형 발전을 청산하고 중부 중심의 발전에서 탈피해 영토 내 고른 지역

7) 타일랜드 4.0 프로젝트는 태국이 직면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스마트 산업(Smart Industry), 스마트시티(Smart City), 스마트 인재(Smart People)를 기치로 내걸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이다(이재호 2019a: 6).

발전을 꾀하던 태국의 지역 발전 계획이 다시 중부 중심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한유석 2019: 230).

2. 대외관계: 서방국가와의 관계 회복 및 한국과의 관계 진전

2014년 5월 쿠데타는 태국의 외교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미국과 EU 국가들은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면서 군부를 비난하였으며 외교관계 수준을 강등시키는 등 제재를 가했다. 반면 아시아권 국가들의 반응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비판조도 옹호도 아닌 입장을 취하였다. 중국은 무비판으로 일관하였으며, 일본은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한 최초의 입장과 달리 태국 방콕에서 세 개의 국제공항(돈므앙 공항, 쑤완나폼 공항, 우타파오 공항)을 연결하는 220km의 고속철도 건설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⁸⁾ 주변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의 내정불간섭주의 원칙을 고수하였다(박은홍 2018: 215).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를 지적하며 제재를 가하던 미국 및 EU와의 관계는 2017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중국과 관계가 급진전되는 걸 우려한 미국과 EU는 2017년부터 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2017년 4월 와치라롱건 국왕이 신헌법을 인준하였고, 태국 정부가 구체적인 총선 일정을 언급하며 권력의 민정 이양 의지를 공표하였기 때문이다(김홍구·이미지 2019: 141-142). 서방국가들의 관계 개선은 2019년 선거로 인해 더욱 공고해졌다. 이는 비록 불공정 선거 논란이 있었고 친군부 세력

8) 일본의 태국 고속철도 협력 사업 참여는 사업이의 분석 단계에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자 2019년 초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 대신 동부경제회랑(EEC) 내 물류, 에너지, 스마트시티 공업단지 조성, 의료 등 헬스케어 관련 52개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출처: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ecoCartoon&nttId=202645>).

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선거를 통한 권력 이양이라는 명목 하에 선거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기에 가능하였다. 또한 2019년 내내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대안 시장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아세안 내 영향력 확보와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서도 미국은 태국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했다. 2018년에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두 차례 개최되었으며, 2019년 11월 17일 프라웃 총리와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장관은 군사안보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020 공동 비전 성명'(2012 joint vision statement)에 서명하였다(The Diplomat 2019/11/19).

2019년 태국의 대외관계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졌다는 점이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이라는 슬로건 하에 외교안보 차원에서 아세안을 주변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수준의 협상 파트너로 격상시키려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였다(이재현 2018: 2). 기존 주변 4강 중심의 외교 정책과 차별화된 외교 및 대외협력 구상(우양호 2019: 146)인 신남방정책을 표방함에 따라 대상국가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특히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은 한국의 아세안 시장 공략과 더불어 새로운 외교안보 파트너로 적격이었다.

태국도 한국과 우호 관계를 넘어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 중국과 일본 외에 제3의 경제협력 파트너를 찾는 상황에서, 타일랜드 4.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미래형 산업 육성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디지털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과의 협력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상태에서 아세안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경제적 측면에서 아세안 시장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은 타일

랜드 4.0으로 대표되는 미래형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양국 간 관계는 9월 2일 한-태 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공식 방문, 11월 3-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11월 25-27일 빠라웃 총리의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해 진전되었다. 9월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고, 첨단 기술 산업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The Korea Times 2019/09/02).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동부경제회랑(EEC) 내 한국 기업 유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미래 산업의 중심축인 첨단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헤럴드경제 2019/11/25).

IV. 나오며

2019년 태국 사회는 5년 만의 선거를 통해 새 정부를 선출하였다. 선거 과정과 이후의 과정에서 불공정 선거와 부정 선거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친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의 승리로 귀결되었으며 빠라웃의 총리 집권 기간도 연장되었다. 기존 태국 정치의 두 축이었던 친탁썬 계열의 프어타이당이 정권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였으며, 또 하나의 축이던 민주당은 신흥 강호로 떠오른 아나콧마이당에 제3당의 위치마저 내주며 총선에서 참패하였다.

오랜 기간 선거가 연기되었고 군부가 집권을 연장하면서 태국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팽배해진 상태다. 더불어 군부와 결탁 관계에 있는 왕의 기이한 행적에 대한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탁썬 세력에 기대를 거는 것도 아니다. 2000년대 이

후 태국 정치의 한 축이었던 탁싌 세력에 대한 기대도 예전만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아나콧마이당의 행보가 주목되지만 신생 정당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실제로 총선 과정에서 아나콧마이당이 제시한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했다는 점, 신생 정당으로서 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렇듯 정치적 변혁의 변곡점 위에 놓여 있던 2019년 태국 사회에 여전히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되었다. 기존 선진국 현상으로 치부되던 저출산·고령화의 가속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경제성장률도 전년 대비 1% 감소하였다.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 분배도 더욱 심화되었는데, 1%가 50.4%의 부를 소유하는 극단적 형태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도 여전히 큰 문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제회랑과 경제특구 개발 정책을 도모해 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에 동부경제회랑(EEC) 일대에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려는 타이랜드 4.0 프로젝트를 가동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시 중부 중심의 불균형 발전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2020년 태국 사회는 언제나처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부정 선거와 불공정 선거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정치적 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타나턴과 아나콧마이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생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삶의 정치’, ‘살림의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수. 2017. “태국 정부가 새로 내놓은 동부경제회랑 개발 계획.”
코트라 보도자료(2017.03.10).
- _____. 2019. “태국 고령화 사회 진전 가속화, 우리의 기회는?” 코
트라 보도자료(2019.07.05).
- 김홍구. 2019. “태국 2019 총선결과와 정국전망.” 『동남아 3국 및
인도의 선거 결과 분석과 신남방정책을 위한 제언』. 신남방
지역 정세분석 세미나 발표문.
- _____. 이미지. 2019. “태국 2018: 군부의 ‘불완전한’ 민간정부 복귀
를 위한 막바지 준비.” 『동남아시아연구』 29(2): 127-159.
- 박은홍. 2018. “2017년 타이: ‘짜릿모델’의 부활과 타이식 민주주의.”
『동남아시아연구』 28(2): 213-247.
- 연합뉴스. 2019.12.30. “의원직 잃고 당 해산 위기에도 타나톤, 태국
차기 총리감 1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49300076?input=1195m> (검색일: 2020/01/22)
- _____. 2020.01.21. “태국 제3당 FFP 해산위기 일단 넘겨... 고비
한 번 더 남아.”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1130600076?input=1195m> (검색일 2020/01/22)
- 우양호, 2019, “동아시아 해역공동체를 향한 ‘신남방정책’의 의미와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 20(2): 135-175.
- 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아산정책연
구원 이슈브리프, 2018.01.24.
- 이재호. 2019a. “최근 태국 경제 현황 및 한국-태국 경제협력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9b. “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겨레. 2019.11.17. “‘고령화’ 진행중인 동남아 국가들도 ‘정년 연

- 장' 추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7321.html (검색일: 2020/01/05)
- 한국금융. 2019.07.07. “고령화를 국가 거점사업으로 활용하는 태국.” http://cnews.ftimes.com/html/view.php?ud=201906290545489525dd55077bc2_18 (검색일: 2020/01/05)
- 한유석. 2019. “태국의 지역 발전 계획과 불균형 발전 현황.” 『동남아시아연구』 29(3): 215-247.
- 헤럴드경제. 2019.11.25. “문대통령, 빠라웃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 태국은 영원한 우방.”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2500030> (검색일: 2019/12/29)
- Bangkok Post. 2016.01.14. “Ageing Population Poses Development Challenges.” <https://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825752/ageing-population-poses-development-challenges> (검색일: 2020/01/08)
- _____. 2018.12.06. “Report: Thailand Most Unequal Country in 2018”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1588786/report-thailand-most-unequal-in-2018> (검색일: 2020/01/08)
- _____. 2019.03.07. “Constitutional Court Disbands Thai Raksa Chart.”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1640796/constitutional-court-disbands-thai-raksa-chart> (검색일: 2020/01/20)
- BBC. 2019.03.24. “Thailand Votes in First Post-coup Election” https://www.bbc.com/news/world-asia-47664201?intlink_from_url=https://www.bbc.com/news/topics/c4l37mgp4q4t/thailand-election-2019&link_location=live-reporting-story (검색일: 2019/12/30)

-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2019. "Global Wealth Report 2019."
- Damrongplasit, Kannika and Glenn A. Melnick. 2009. "Early Results from Thailand's 30 Baht Health Reform: Something to Smile about." *Health Affairs* 28(3) : 457-466.
- Debavalya, Nibhon. 2008. "Ageing Policies and Programmes in Thailand." *Ageing in Southeast and East Asia: Family, Social Protection, Policy Challenges*(edited by Lee Hock Guan): 134-154.
- Deloitte Thailand. 2019. "Economic Outlook Report 2019." Deloitte Thailand.
- Khaosodenglish. 2020.01.21. "Court Acquits Future Forward of Anti-Monarchy Allegation." <http://www.khaosodenglish.com/politics/2020/01/21/court-acquits-future-forward-of-anti-monarchy-allegation/> (검색일: 2020/01/22)
- NESDB(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2017. "The Twelf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2017-2021)." NESDB.
- Prachatai. 2019.03.24. "Support Good People to Rule This Country, Says King of Thailand on Eve of Election." <https://prachatai.com/english/node/7990> (검색일: 2020/01/11)
- Prasartkul, Pramote. 2016. "Situation of the Thai Elderly 2014." Foundation of Thai Geront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TGRI).
- Seo, Bo Kyeong. 2015. "Thai Public Health Care Suffering by Association." East Asia Forum. <https://www.eastasiaforum.org/2015/04/15/thai-public-health-care-suffering-by-association> (검색일: 2019/12/28)

- Thailand Business News. 2019. "How Thailand Gave Healthcare to Its Entire Population." <https://www.thailand-business-news.com/health/77060-thailand-ranks-sixth-for-worlds-strongest-health-security.html#more-77060>. August 26. (검색일: 2020/01/05)
- _____. 2019. "Thailand Ranks Sixth for World's Strongest Health Security." <https://www.thailand-business-news.com/health/75510-how-thailand-gave-healthcare-to-its-entire-population.html>. November 18. (검색일: 2020/01/05)
- The Diplomat. 2019. "What's in the New US-Thailand Alliance Joint Vision Statement?" <https://thediplomat.com/2019/11/whats-in-the-new-us-thailand-alliance-joint-vision-statement/>. November 19. (검색일: 2020/01/11)
- The Korea Times. 2019. "South Korea, Thailand Hold Summit on High-tech Industry Cooperation"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19/11/120_274943.html. September 02. (검색일: 2020/01/11)
- The Nation. 2018. "NESDB denies Thailand has Biggest Income Gap in World." <https://www.nationthailand.com/breakingnews/3035999>. December 17. (검색일: 2020/01/08)
- _____. 2019. "Healthcare Challenges Increase as Thailand Grows Older." <https://www.nationthailand.com/Economy/30366726>. March 28. (검색일: 2020/01/05)
- Whittaker, Andrea. 1998. "Women's Desires and Buren: Family Planning in Northeast Thailand." *Asian Studies Review* 22(2): 137-155.
- Election Commission (Thai version, 28 May 2019). 2019. "Lakken lae Vithikarn-khamnuan Seo. Seo. Baeb Banchee Rai-cheu (Prakat

154 동남아시아연구 30권 1호

Khrang-thi 2 Kheomoon Neo. Wan-thi 28 Phreutsaphakhom
2562).” https://www.ect.go.th/ect_th/download/article/article_20190528140635.pdf (검색일: 2020/02/07)

(2020.01.23. 투고, 2020.01.23. 심사, 2020.02.04. 게재확정)

<Abstract>

Thailand 2019: The Inauguration of the Junta-centered Coalition Government and the Rapid Increase of the Aged Population

HAN Yu Se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2019 general elections in Thailand, five years after the 2014 military coup, resulted in a victory for the military-backed Palang Pracharat Party. Several features summarise this election: the defeat of the pro-democracy party, Pheu Thai Party which linked to the pro-Thaksin faction, the rise of newly formed Anakhot Mai Party, the failure of the Democratic Party which has been one of two major political parti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ilitary rule by forming a coalition government of pro-military forces, and the inauguration of the Prime Minister of Prayut Chan-o-cha. In the meantime, the aging population, which is typically considered as a phenomenon in developed countries, has continued to accelerate in Thai society. Thailand is rapidly becoming an aging society due to the success of family planning projec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al health coverage scheme. In this regard, the Thai government is trying to solve the problem of an aging society by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and providing pensions.

Thailand experienced economic hardships as problems have continued

from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In 2019, the economic growth rate of Thailand recorded 3.1%, down 1 per cent from the earlier year. The repercussion of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has hurt Thailand's export market, leading to a downturn in the domestic market. On the other hand, polarization and inequality, which are the chronic problems of Thai society, continued. Furthermore, inequality among regions is one of the serious social issues as well. The East Economic Corridor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industrial cities in the central area of Thailand nearby Bangkok and Thailand 4.0 project imply that the government plans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focusing around the central region.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elationship with Western countries improved following the general elections, and in particular, Thailand participated in the Korea-ASEAN Special Summit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ASEAN chair country to discuss strengthening cooperation to create synergy between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the Thailand 4.0 Project.

Key Words: 2019 Thai general election, military-centered coalition, aging society, Thailand 4.0, Korea-ASEAN Special Summit